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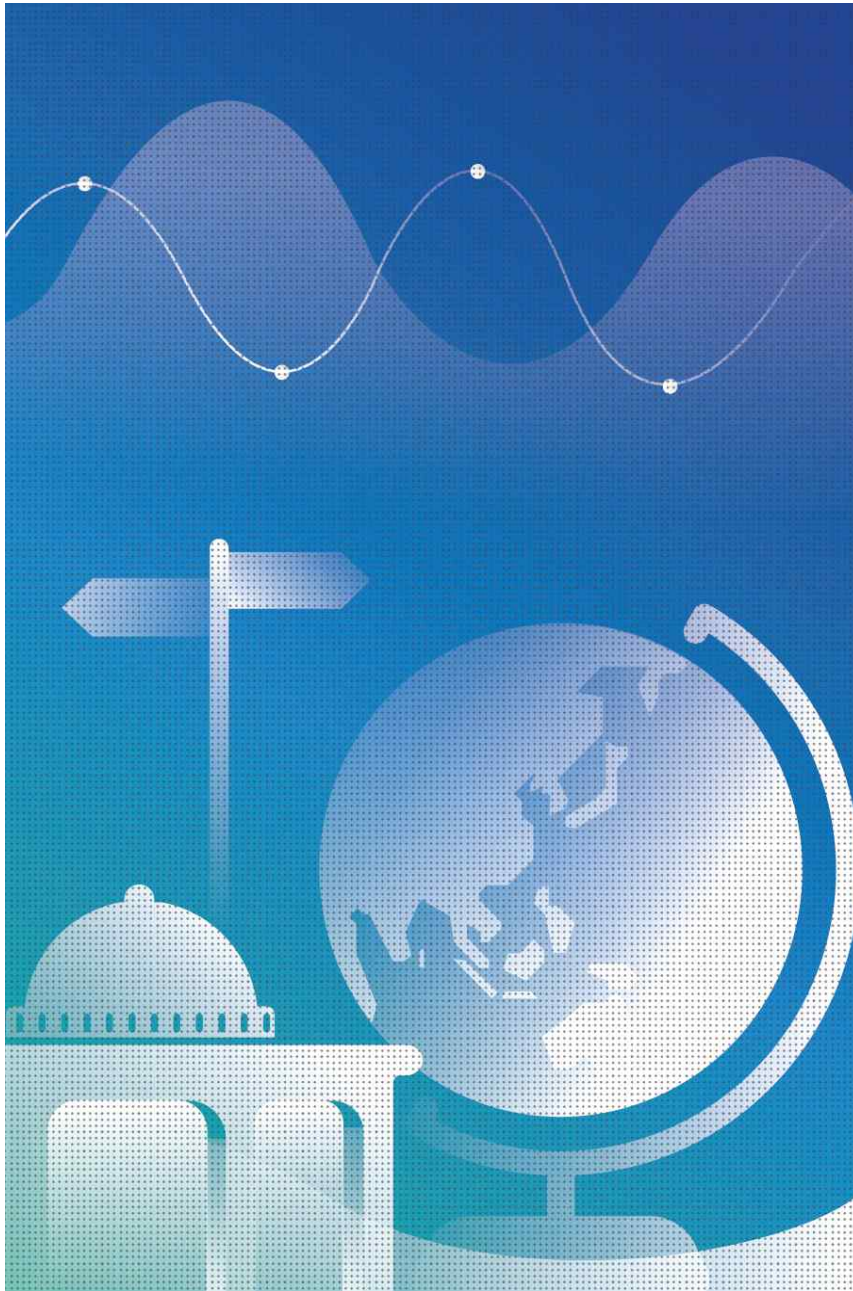
2021 ISSUE REPORT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8(2021.10)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한 한-아세안 협력방안 모색



CONTENTS

- I.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변화
- II. 신남방정책의 수립과 발전
- III.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 IV.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작성

책임연구원 이지혁 (6255-3614)

j.lee@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I.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변화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hip)에서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

- 한국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아세안과의 공식관계 설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세안(ASEAN)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1989년에서야 비로소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음. 그 후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hip) 관계를 수립하였고, 2004년 포괄적 협력동반자(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관계를 선언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하였음.

[표 1] 한-아세안 관계

단계 구분	내용
시작 단계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 관계 수립
발전 단계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hip) 관계로 격상
	1998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04년 포괄적 협력동반자(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관계 수립
	2006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2007년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공고화 단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12년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설치
	2017년 신남방정책 수립
	2019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수립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 인식: 동아시아 다자외교에서 아세안의 역할 증가, 아세안과의 경제 관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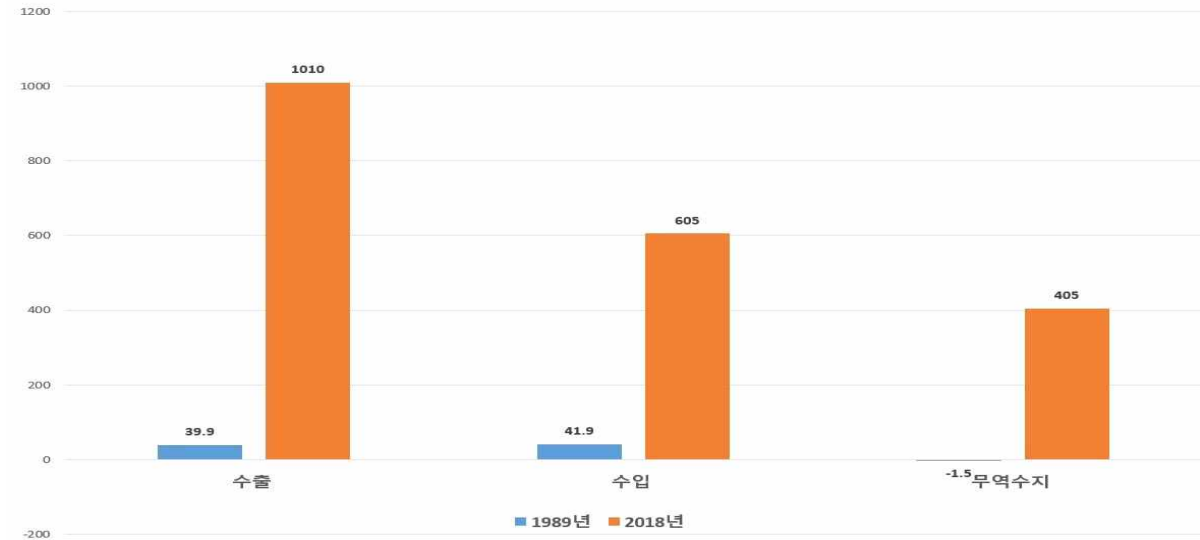
-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아세안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아세안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한국전쟁 이후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에 함몰되었던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2017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일본과의 역사 및 경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주변 4강 중심에서 벗어나 외교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켰음.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각각 싱가포르(2018.06.12.)와 베트남 하노이(2019.02.27.)에서 개최되었으며,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Jakarta-Palembang)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남·북한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아세안 회원국 중 다수가 남·북한 모두와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하였음.



- 한편, 한-아세안 무역 관계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dialogue partner)'를 수립했던 1989년과 비교해 30년 후인 2018년에는 교역액이 약 20배 증가하였고, 동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 및 수입 규모가 각각 7.3배와 6.8배 증가하였음. 1989년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약 1억 5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약 40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림 1] 대 아세안 수출입 통계 비교(1989년 vs. 2018년)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9

[그림 2] 한-아세안 무역 현황

한-아세안 무역량 추이

2020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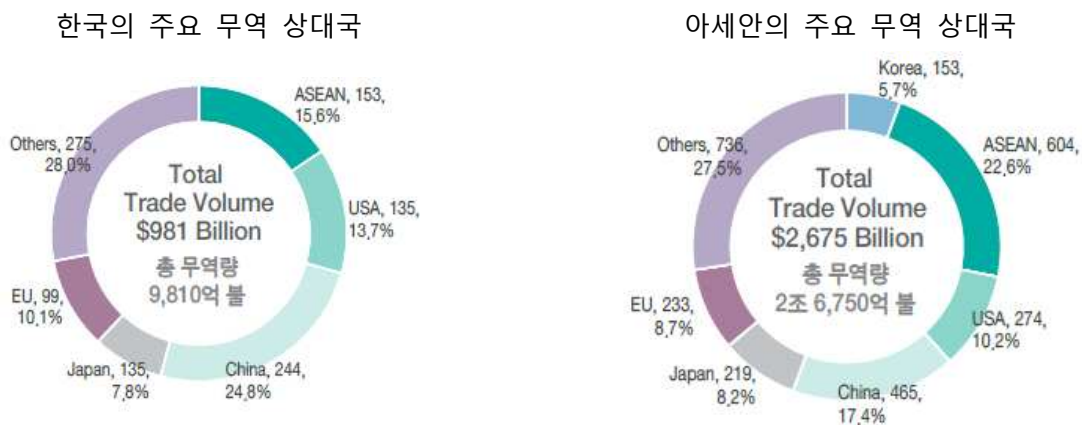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IMF)
 주) 십억 달러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IMF)
 주) 백만 달러, %



- 한-아세안 교역량은 지난 3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여 아세안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권이 되었음. '2019 한-아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총무역량 9,810억 달러(1,202조 7,060억 원) 가운데 중국이 24.8%인 2,440억 달러(299조 1,44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세안이 15.6%인 1,530억 달러(187조 5,780억 원)로 뒤를 이었음.¹⁾
-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2011~15년 투자 대비 2016~20년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 증가율은 74.2%로 주요 투자국인 중국(65.4%), 대만(40.6%), 일본(21.8%)보다 높은 수치임. 순투자 기준으로 2016~20년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2011~15년 대비 66.3% 증가한 316억 달러(약 37조 1,710억 원)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의 비중은 2014년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였고(2014년 중국 12.9%, 아세안 16.2%)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비중이 20.3%로 확대되었음.²⁾

[그림 3] 2019년 한국 및 아세안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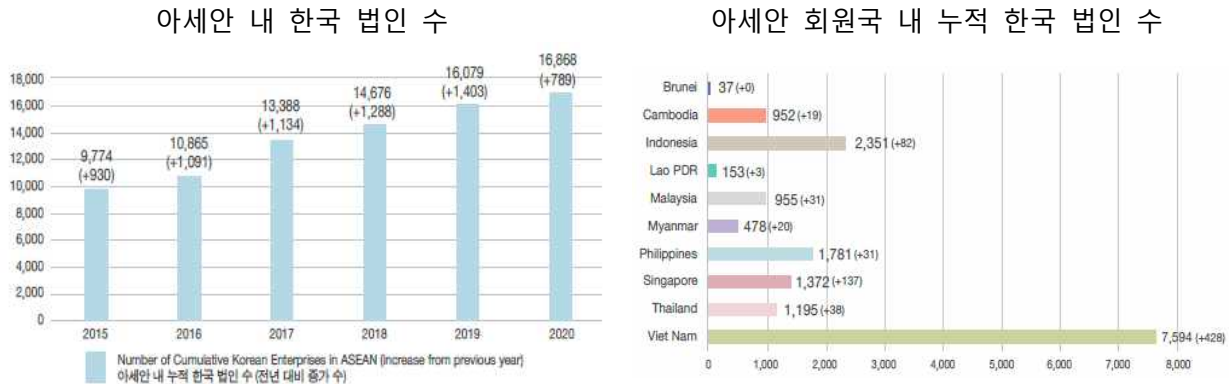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IMF)
 주) 십억 달러

- 아세안 내 신규 한국 법인 수는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약 천여 개씩 증가하여 2015년 9,774개에서 2020년 16,868개로 증가하였음.
-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했는데, 초기에는 자원(주로 목재)을 획득 하려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음으로 소위 TGF라 불리는 섬유(Textile), 의류(Garment), 신발 (Footwear)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해 동남아로 생산거점을 이동하였 음. 그 뒤를 이어 생산에 직결되는 원·부자재 확보와 조립 공정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수 출 거점 및 우회 수출기지로 동남아를 활용하였고, 보다 최근에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 기업 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 전후로는 본격적으로 내수를 겨냥한 기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1) 한-아세안센터. 2020. “2019 한-아세안 통계집.”
 2)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21. “글로벌 공급망 아세안 시프트와 과제.”



[그림 4] 아세안 내 한국 법인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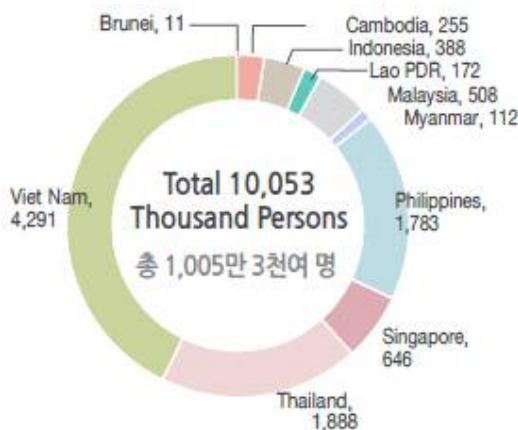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에 따른 활발한 인적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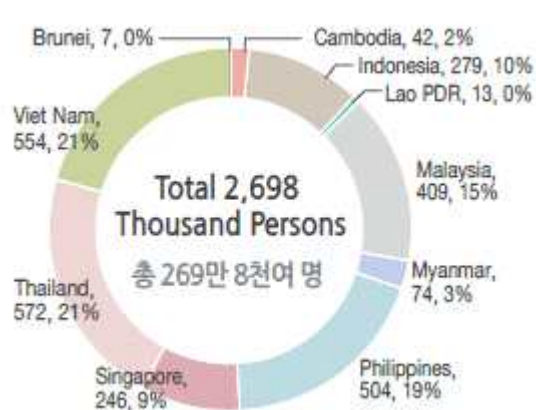
-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신남방정책, 한류의 높은 인기 등은 한-아세안 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아세안 국가를 여행지로 선택한 한국인은 약 1천만 명이었으며, 한국을 찾은 아세안 방문객은 약 270만 명이었음.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베트남(1위), 태국(2위), 필리핀(3위) 등이며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아세안 국가로는 태국(1위), 베트남(2위), 필리핀(3위) 등임.

[그림 5] 2019년 한-아세안 방문객 교류 현황

2019년 한국인 방문객의 아세안 방문 현황



2019년 아세안 방문객의 한국 방문 현황



자료: 아세안 회원국 관광청; 한국관광공사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인적 교류 중 주목할 부분은 신남방 국가 정상과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정상 방문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수교 30년을 기념하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기간 장관급 회담이었던 한-메콩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하여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2019.11).



II. 신남방정책의 수립과 발전

신남방정책 수립과 전개 과정

-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은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국가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천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공동체 구축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음.

[그림 6] 신남방정책 핵심 개념(3P)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동남아 3개국 순방 중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음.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³⁾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축을 구성함.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과 경쟁 구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구상임. 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이 있음.

[표 2]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조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	평화의 축
	• 신남방정책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 대 인도 정책	⇒	번영의 축
	• 신북방정책	⇒	

3) '동북아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동북아와 그 이상(동북아 and beyond)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그림 7] 한반도 신경제지도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를 설립하였고, 동년 11월에 3대 목표, 16개 전략과제, 57개 중점사업을 수립하였음. 이후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년 12월에 16개 전략과제를 19개로, 57개 중점사업을 94개 중점사업으로 확대하였음.

[표 3] 신남방정책 전략과제

구분	목표(성과지표)	전략과제
사람 공동체 (People)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2020년까지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 명 달성)	1. 상호방문객 확대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4.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5.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6. 삶의 질 개선 지원 (+) 사람분야 한-메콩 협력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구축(아세안: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 달러)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8.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9.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10. 신산업 및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11. 국가별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 한-인도 신산업 협력 추진
평화 공동체 (Peace)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정상 방한 등 전략적 협력)	1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14. 국방·방산 협력 확대 15.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16.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 한-메콩 평화협력 증진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 (+)는 16개에서 19개로 확대되며 추가된 전략과제임.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

- 신남방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질서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4강에 편중된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 외교적 재균형정책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더불어 강대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과 외교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기존 정책과 달리 상호호혜성을 지향하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한국과 아세안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임을 강조함으로써 아세안 지도자들로부터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음.
- 구체적인 성과로는 2019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간 장관급 회의로 개최된 한-메콩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한 것, 한-아세안의 교역량 증가, 인적 교류 확대, 정상급의 신남방 국가 방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⁴⁾ 타결 등을 꼽을 수 있음.
- 2016년 1,346억 달러였던 교역규모는 2019년 1,71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7년 58억 달러였던 한국의 신남방 지역 투자는 2019년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더불어 인프라와 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본격화되고 다자·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음.
- 추후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신남방정책이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초점이 대부분 아세안에 맞춰짐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인도와 관련된 정책적 준비의 미흡함을 꼽을 수 있음. 또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비해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이 가져다줄 실질적 혜택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신남방 국가의 정책입안자와 학자들의 인식이 낮아, 이의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함.

[표 4]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

구분	주요 추진 내용
2017.07.19.	100대 국정과제 발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2017.11.09.	신남방정책 발표
2017.11.13.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
2018.08.2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설립
2018.11.0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019.04.16.	외교부 내 아세안국 설립
2019.05.03.	주 아세안 대사 차관급 격상
2019.11.0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2019.11.25.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2019.11.25.~27.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2020.11.12.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발표

자료: 언론매체 발표자료

4) RCEP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인도가 2019년 불참을 선언하여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협정으로 타결됨.



Ⅲ.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코로나19 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반영

-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에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신남방정책의 점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신남방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New Southern Policy Plus)'를 발표하였음.
- 신남방정책이 코로나19 발발로 사업 실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0년까지 교역량 2,000억 달러 달성과 1,500만 명 수준의 인적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음.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0년 초에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신남방정책을 재검토하였음. 그 결과 신남방정책의 중점 협력사업이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어 전략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사업의 선정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수요와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⁵⁾
- 신남방특위의 설명에 따르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추진 배경은 (1)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협력 수요 증대 및 비대면 등 새로운 협력 방식 부상, (2)보호무역주의 심화, 물자인력 이동 중단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3)5G, AI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및 디지털 격차 확대, (4)신남방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업의 효율성과 변화된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19개 분야 94개 사업을 7개의 협력분야로 업그레이드하였음.
- 7개 협력분야에는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적자원 개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호혜적 무역·산업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미래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 비(非)전통 분야 안보 협력이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정책체계 측면'에서는 3P⁶⁾ 중 사람(people)의 비중 확대, 양방향성 정책 확대, 과도한 지역 불균형 완화, 주변국 전략과의 조화를 포함하는 균형과 조화를 제시하였고, '추진과제 측면'에서는 한국의 강점과 현지 수용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발전 단계 및 국가 특성을 고려한 지역·국가별 맞춤을 제시하였으며, '추진방식 측면'에서는 정부·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강화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하였음.⁷⁾

5) 김영선. 2021.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파트너십." 웹진 서강동연 Vol. 6.

6) 3P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공동체를 지칭함.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KIEP, 신남방정책 성과 평가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추진방향 논의." 보도자료.



[표 5]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중점분야 주요 추진 사업

분야	개요	주요사업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K-방역 및 K-Health 노하우 공유, 신남방 보건·의료 역량 제고, 보건·의료 산업 서비스 제공	- 감염병 대응 지원 및 K-방역 경험 공유 - 의료인력 역량 및 의료체계 지원 - 역내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의료기술 R&D 및 의료산업 상생 협력
교육 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한국형 교육모델을 통한 전문역량 개발, 한국어 교육 플랫폼 기반 강화	- 인적 역량 개발 및 K-Education 모델 공유 - 교류 확대와 연계한 한국어 사용기반 확대 - 미래 기술인력 역량 개발 기여 -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교류 지평 확대	-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 플랫폼 구축 - 한류 확산과 연관사업 동반 성장 - 관광 및 스포츠 교류 지평 확대 - 다문화 포용성 강화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경제협력 강화, 상생번영의 기틀 강화	-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촉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 확대 기반 조성 - 기업 책임 경영 및 현지 기여활동 확대 - 에너지·자원 분야 확대 기반 조성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농어촌 낙후지역 개발 지원,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사업 참여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농어촌 개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 스마트시티 개발 및 인프라 개선 - 인프라 사업 재원 조달 원활화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산업 협력	미래산업 분야(스타트업, 4차산업, 5G) 협력을 통한 신남방 지역과의 상생 발전 도모	- 4차산업 분야 협력 - R&D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 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	환경(기후변화)·해양·물관리·초국가범죄 등 사람 중심의 비전통 안보 협력 강화, 메콩 지역 복원력 제고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 해양 보호 및 환경 협력 - 초국가 범죄 및 국제평화 협력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주 아세안 한국대표부와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공동 개최한 '제2차 신남방 정책 포럼'(2021.03.29.)에서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부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팬데믹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과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음.
- 아세안은 2020년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공동대응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이하 ACRF)'를 채택하였음. ACRF는 5가지의 포괄적 전략(broad strategies)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우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표 6]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전략

포괄적 전략	주요 내용
전략 1: 보건 체계 개선	- 현재의 건강편익(health gain) 유지 발전 - 핵심 의료 서비스 및 백신 안보 강화 - 고급 의료 인재 양성 - 공중 보건 서비스 강화
전략 2: 인간 안보 강화	- 사회 안전망 강화 - 식량 안보 강화, 취약 계층의 식량 안전 및 영양 강화 - 재교육(reskilling), 향상교육(upskilling), 디지털 교육, 고등 교육 증진 - 뉴노멀에 따른 노동정책 강화 - 팬데믹의 대응 및 극복 과정에서 성주류화 ⁸⁾ 우선 고려 - 포스트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전략 3: 아세안 역내 시장의 잠재력 극대화 및 포괄적인 경제통합	- 역내 공급망 복원력 및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아세안 역내 무역 및 투자 증진 - 팬데믹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역내 시장의 잠재력 극대화: 시장 개방,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비관세 장벽 제거, 무역 절차의 디지털화 -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모색 - RCEP을 통한 아세안의 글로벌 마켓의 적극적 참여
전략 4: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증진 - 전자정부, 전자 서비스, 디지털 연계성, 교육에서의 ICT 사용,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인프라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략 5: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 정부, 산업, 시민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모든 차원에서 아세안의 지속가능성 획득: 투자, 에너지, 그린 인프라, 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금융

자료: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ACRF의 협업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한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안인 ACRF의 정책적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그에 따르는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 국가와 코로나19 방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꼽을 수 있음.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20%까지 떨어지면서 반도체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세계 주요 완성차업계의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8) 성주류화는 모든 정책과 분석에 체계적으로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지칭함.



- 국립외교원은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중점 협력분야 중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적자원 개발 지원’, ‘농어촌 및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원’, ‘4차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사업’이 ACRF의 핵심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조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⁹⁾
- 작년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하면서, 동시에 ACRF와의 긴밀한 협력과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힘.

[표 7]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의 협업

NSP Plus	협력 분야	AC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 인적자원 개발 지원 • 농어촌 및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원 • 4차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사업 	

자료: 국립외교원

IV.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신남방 국가의 환경 변화에 따른 현지 맞춤형 대응 필요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재편,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의 신남방 국가로의 이전,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 현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무엇보다 향후 5년간의 신남방정책 이행 전략으로 제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중점협력 분야와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및 이행계획을 잘 연계하여 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
-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는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컨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¹⁰⁾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임.
-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세안 선도국가들은 중국의 저부가가치 상품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동남아로의 공장 이전을 자국의 해외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동시에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반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9) 최원기. 2020. “신남방정책 플러스: 중점분야와 추진방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0)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1994년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춰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4년 출범하였음. 회원국으로는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기타 7개 국가가 있음.



- 아세안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정부의 예산으로 재원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한국 민간기업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중국의 물량 공세와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관-학의 협업이 필요함.
-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디지털 기술 시장의 성숙기에 진입한 선진국보다 동남아 신흥국에서 변화의 속도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빠른 디지털 경제 성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동 지역의 ICT 인프라는 이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ICT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건설, 5G, 사이버보안, 정보통신 인력 양성, ICT 관련 물류 산업, ICT 관련 제도 등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지 제조업 육성은 한국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육성과 함께 원·부자재의 현지화율을 높이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최근 많은 신흥국은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이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 및 현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경쟁력 있는 협력사와의 현지 동반 진출', 디지털 전환 지원과 현지의 인프라 및 기술인력 개선 등을 통한 '현지 협력사 경쟁력 제고 지원', 현지 기업에 대한 '유·무상 기술이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에도 필요한 것으로서 기업의 CSR과 한국 정부의 유·무상 원조와 연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브랜드화된 제도적 협력 플랫폼 필요

- 신남방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는 대 동남아 정책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예컨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인프라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협력국에 일대일로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것처럼 한국도 경쟁력 있는 디지털 전환 및 ICT 분야에 특화되고 브랜드화된 협력 플랫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아세안의 수요 및 여건과 한국의 강점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ICT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현지 제조업 육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